

## “한 명이라도 더” 총선 가늠자 권리당원 확보 전쟁

민주당 광주, 39만 당원 중 진성 권리당원 7만2000명 안팎  
 입당원서 잡음·선거브로커 활개...“민심 외면 우 범할 수도”

제22대 총선이 10개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8개월 앞으로 각각 다가오면서 '본선과도 같은 경선'을 앞둔 민주당 입지자들 사이에 경선 투표권을 쥔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11일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2월 말이나 3월 초 치러질 당내 경선을 2020년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에 맞춰 오는 7월31일(대리접수는 7월14일)까지 당원을 모집 중이다. 경선 투표권은 신규당원 중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주어진다.

올해 3월 말 기준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

원 39만명 가운데 진성 권리당원은 7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8개 지역위원회별로 인구수와 당원수, 경선 여건 등이 달라 평균치를 내는 건 무리지만 산술적으로는 1개 지역위원회당 권리당원은 9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당비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역외 유출 등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지만, 단순 계산으로 최소 4000명, 많을 경우 5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보하면 경선 승리를 위한 안정권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자들 모두 정성을 다해 지지해 줄 또 다른 의미의 '진성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역은 '여의도 크루'까지 지역구에 불러 모아 '집토끼'를 기반으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

고, 정치신인을 비롯해 도전장을 낸 경쟁 후보들은 학·지·혈연과 '커리어 인맥'을 통한 지지층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 A의원의 측근은 “서울에서 활동중인 보좌진, 비서관까지 지난달부터 광주로 내려와 지역구 관리에 힘 쓰고 있다”며 “권리당원 모집이 끝나면 3개월 뒤 다시 내려와 본경선과 총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료 출신 정치신인 B씨는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고, '본선 승리=당선'이라는 공식과 인식도 강해 힘든 싸움이지만, 인지도 높이기와 함께 권리당원 확보에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3000명을 모았다”는 또 다른 예비후보자 C씨는 “당원 모집에 비해 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답은 권리당원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원모집 경쟁은 정치모임은 기본이고 마을 공동체 소모임이나 찜질방, 체육센터 등으로도 진동과 여파가 미치고 있다.

부작용과 후유증도 일고 있다. 광주전남정

치개혁연대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당원서 지침과 관련해 '지지 후보 표명' 논란에 이어 개입방지 조항들의 '주소지 기입 문제'까지 공개 비판했고, 결국 광주시당은 '지지후보 명기'를 없던 일로 백지화했다.

정치브로커 활개설도 끊이지 않는다. “당비를 대신 내주면, 권리당원 수 백명을 모집해 주겠다” “100명 가까운 회원을 지닌 모 단체의 운영진을 소개해 주겠다”는 식의 브로커 행위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당대회 돈봉투, 과거 경선 대리투표 사건 등 각종 선거 비리가 권리당원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을 정도로 권리당원은 권리가 큰 만큼, 리스크도 매우 높지만 현장은 또 다시 권리당원 모집 과열로 곳곳에 잠재적 시한폭탄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권리당원에만 열을 올릴 경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정치 개혁과 인적 쇄신, 강도높은 공천률 혁신 등이 필요했던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일 650t 처리’ 광주시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에 1곳 신청  
 3240억원 들여 2029년까지 완공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1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에 대비한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지 선정을 위해 개인과 단체·5개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날 현재 1곳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5개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당구는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서구와 남구는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민원 우려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북구도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산구는 조만간 열리는 5개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면적 6만6000㎡ 이상 대지에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t이다.

광주시는 여가공간을 함께 조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오염물질 최소화·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방안은 폐기물 시설 축진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설 공사비 20% 내에서 체육시설·문화공원·레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원 기금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육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은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생성 억제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3~4단계 처리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한 주요 오염물질 감시 등이다. 오염물질 데이터는 소각장 주변에 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대표·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임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라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변용일기자

## “해남 수돗물서 흠냄새 신고 인체무해·3분 이상 끓여 사용”

전남 해남 일부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Geosmin) 물질이 초과 검출돼 관계당국이 끓인 물을 음용 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해남읍에서 2건, 산이·황산·북평면에서 각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됐다. 해남군은 덕정정수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장흥댐에서 흠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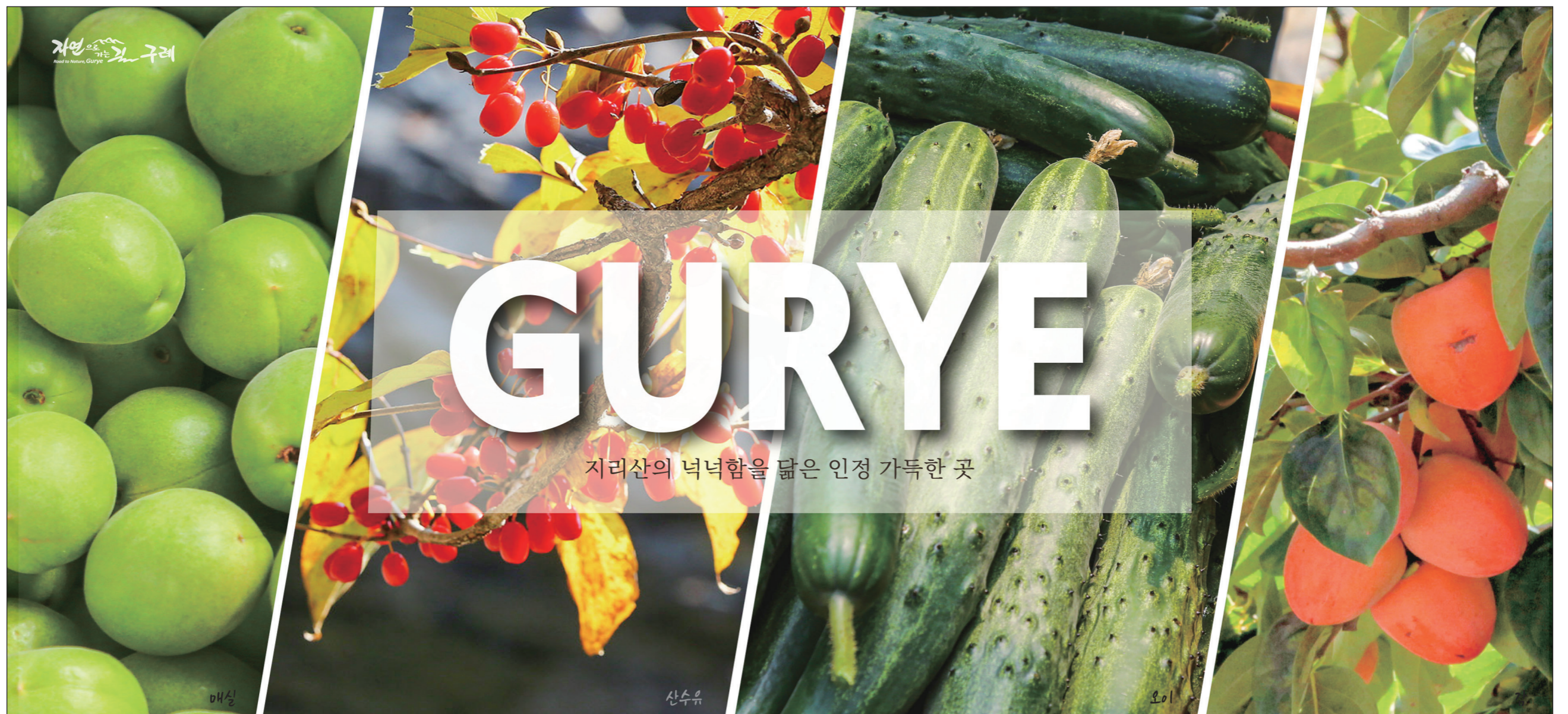
덕정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해남읍과 산이·황산·북평·현산·옥천·마산·화원·북일면 등 10개 지역이며 삼산·화산·송지·계곡면 등 4개 지역은 제외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덕정정수장에는 현재 이틀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저장돼 있어 냄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오스민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수돗물 음용 시 불쾌감을 줄 수 있어 3분 이상 끓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잠수교 그늘아래 나들이객들이 11일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차 없는 잠수교 두벌두벌 축제'를 즐기고 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